

한반도 통일의 현실과 한국교회의 과제

—하나의 평화경제적 상상**

유영식*

I. 서론

한반도 분단 이후, 통일은 일체의 이견도 허용되지 않는 당위(當爲)로 자리매김했다. 통일은 분단극복과 국가통합이라는 민족적 과제의 완성체로 이해되어, 통일이 ‘절대적 대명제’라는 점에 대한 사소한 의심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반면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라면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 있었다. 불행하게도 분단극복을 위한 첫 번째 시도는 한국전쟁이었다. 무력을 동원한 통일의 시도는 실패했고, 한국전쟁의 종결에 따라 1953년 수립된 정전체제 하에서 한반도는 소극적 평화를

* 장로회신학대학교 통일학 교수

** 이 글은 2021년 7월 5일 평화드림포럼에서 발표했으며, 이후 장로회신학대학교 「장신논단」 53-3호에 게재되었음을 미리 밝혀둔다.

유지하고 있다. 전쟁은 부재(不在)할지라도 남과 북은 상호불신을 내재화하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을 확대·재생산했다. 상호 적대와 의존의 부조(扶助) 관계를 지속하면서, 적의 위치에서 상대의 존재 논리를 제공해주고 공생하며 서로 부양해주는 동학을 지속하고 있다.¹⁾

1980년대 말 세계적 차원의 탈냉전으로 냉전구도가 종식되고, ‘역사의 종언’이라는 장밋빛 전망까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는 진영대결과 갈등이 분단 상황과 어우러져 투영되어 왔다. 참으로 모순적이고 역설적이다. 한반도는 세계적 차원의 냉전구도에 의한 최대 피해자였지만,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냉전의 덩어리’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특수한 지정학적 특성에 기인하는 동북아시아의 구조상, 냉전의 시대가 퇴장하고 공존과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세계사적 조류에 역행하면서, 한반도는 자율적인 화해조차 선택할 수 없는 국면이 조성되었다. 이런 비정상적인 역사를 친숙한 일상으로 살아온 것은 이미 오래된 현실이다.

남북관계 70년을 돌아보면, 남과 북은 동족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이었다. 민족동질성 회복에 동의하며 남북한 모두 쉴 새 없이 통일을 주창하면서도 상대방에 의한 군사적 위협만을 부각하며 서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해왔다. 때문에 이제는 ‘분단의 영구화’, ‘평화적인 분단’이라는 언술까지 언급하고 있는 정도다. 현실적으로 통일보다 탈분단을 우선해야 한다거나, 남북관계가 영합적(零sum) 게임의 하는 서로 상반되는 대립축이 아니라 서로를 강화시키는

1) 박명림, “한반도 정전체제: 등장, 구조, 특성, 변화,” 『한국과 국제정치』 22-1(2006), 12-13.

상보적 관계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모든’ 통일 혹은 ‘당장’의 통일보다는 적극적 평화의 ‘장기적 과정’으로 통일을 이해하자는 견해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추세들은 당위적이고 제도·물리적인 통일은 현실적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하겠다.

이 글은 두 가지 문제제기에서 시작한다. 첫째, “기존 한반도 통일논의는 현실에 부합하는가? 한반도 통일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논의는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통일은 당위의 차원에서 주장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당장의 통일보다는 당면의 평화가 더 우선하고, 또 장기적인 평화구축이 분단극복과 통일기반 조성이라는 실체에 더 부합한다. 2017년 말 북한이 ‘민족보다 ‘국가’를 호명하고 ‘두 개의 조선’을 강조하고 있는 점, 남한사회 안에서 대북관계에 있어 ‘좋은 이웃’과 같은 제3의 길을 모색하려는 흐름 등은 당장의 통일이라는 숙명론적 명제를 재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둘째, “한국교회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가?” 분단 이후 한국교회는 통일을 민족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인식하고 북한교회와 대화를 시도했고, 1995년 북한이 자연재해 상황을 토로하며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했을 때는 상당한 긴급구호와 원조를 북한에 제공했다. 이로써 남북한 평화구축에도 시의 적절하게 기여한 바도 있다. 주지할 점은 한국교회는 통일과 평화의 관계에서 통일을 중심으로 평화를 사고하는 경향이 여전히 강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당장의 통일에서 당면의 평화로 분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교회도 이전 방식과는 조정된 ‘실용적 접근’을 고민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통일이 단 한번으로 끝나는 일회적 사건일 수 없음을 자각하고, 더

많은 원조(more aid)와 병행하여 더 나은 평화(better peace)를 통해 ‘사실상의(de facto)’ 통일로 나아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통일과 평화가 현실에서는 ‘다르지만 다르지 않은 하나의 여정’이라는 주장²⁾에 대해서 귀를 열어두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당장의 통일이 아니라 미래 한반도 통일 기반조성을 위해, 통일과 평화가 하나의 여정이라는 착상에서 평화경제에 근거한 하나의 구상으로, ‘북한지역 기독교 사적지 관광협력’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본 서론에 이어 2장은 기존 논의된, 통일담론과 통일방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 적극적으로 장기적인 평화의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주장한다. 3장은 경제의 평화적 성격과 경제와 평화의 선순환을 설명하는 평화경제 개념을 살펴보고, 평화경제의 한 축을 이루는 관광에 대해 기술한다. 특히 ‘힘에 의한 평화’와 대비되는 ‘관광을 통한 평화’를 강조한다. 이어 4장에서는 미래 한반도 통일 기반조성에 일조하는 차원에서 하나의 평화경제적 구상인, 북한지역 기독교 사적지 관광협력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5장은 논의된 내용을 요약해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II. 한반도 통일논의와 ‘평화의 과정’으로서의 통일

1948년 이후 남북한의 다양한 통일논의는 ‘법·제도적(de jure)’

2) 정영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이론의 긴장과 현실의 통합,” 『북한연구학회보』 14-2 (2010), 209.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었다. 또한 거칠게 표현하면, 통일논의는 자주화와 국제화라는 흐름을 가장 극명하게 반영해 왔다. 다시 말해 국제적인 상황과는 별도로 민족의 자주적인 입장에서 통일문제를 해결하려는 흐름과 국제적인 맥락에서 문제를 풀어보려는 두 개의 흐름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상호작용해 온 변증법적인 과정이었다.³⁾ 그 과정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통일담론과 통일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변화해 왔는데, 2장에서는 제도적 통일 차원의 통일논의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통일논의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한반도 통일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통일논의의 첫 번째는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다. 기존 연구나 언설(言說)에서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 담론으로 대별된다. 민족주의, 실용주의 그리고 보편주의 차원에서 “왜 통일인가?”에 답을 하고 있다. 물론 이 세 가지 논거들이 모든 개인들의 의식을 전체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상호 이항대립(二項對立)적인 속성을 갖는 것도 역시 아니다. 상호배타적이지 않으며 개념적 교집합이 존재하기도 한다.

세 가지 담론은 어느 정도 시대적 추이(推移)를 보이는 특징이 있는데,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민족주의이다. 민족주의는 통일의 원초적이고 가장 강력한 동력이다. 기실 남북한이 이념과 제도가 이질적인 상황에서 통일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현재로서는 그 동인과 매개는

3) 심지연, 『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와 수렴』(서울: 돌베개, 2001), 19.

단일민족이라는 공통점밖에 없다. 단일민족 국가를 형성해온 역사적 정통성과 민족동질성 차원에서 보자면, 분단은 그 자체로 비정상적인 현상임이 틀림없기 때문에 고질적 분단이 종식되고 하나의 단일한 민족공동체를 이루는 일은 너무나 당위적인 과제이다. 다음은 실용주의이다. 민족주의에 입각한 통일의 당위성이 현저히 약화해가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당화 작업으로 등장한 것이 통일편익을 고려한 실용주의 담론이다.⁴⁾ 실용주의는 통일을 당위적으로 달성되어야 할 '자기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편익, 예를 들어 시장의 확대와 내수 증대, 저렴한 노동력 확보, 막대한 지하자원 이용, 분단비용 감소와 같은 가시적인 편익을 만들어내는 수단으로 본다. 마지막은 보편주의이다. 한반도 통일은 자유, 평등, 인권, 민주주의, 생태환경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 건설로 나아가야 한다는 담론이다.⁵⁾ 통일은 그 자체보다 더 큰, 인류 보편적 가치 속에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같은 세 가지 담론은 통일 자체에 의구심을 갖거나 통일에 대한 열망이 주목할 만큼 식어가는 현재, 그나마 통일의 규범적인 당위성과 필요성을 제공한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이다. 반면, 세 가지 통일담론은 지나치게 '남한' 중심으로 사고하고 있고 변화하는 남북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강력한 사회적 공감대를 유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선, 민족주의의 경우 세계의 여러 국가가

4) 최준영, “통일의 이익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통일의 필요성,” 『국가전략』 22-3 (2016), 115.

5) 박민철, “통일의 동력으로서의 민족이라는 새로운 ‘환상체계,’” 『한국학연구』 52 (2015), 73-99.

다민족 1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현실에서 ‘1민족 1국가’라는 공식은 일반명제로서 타당성이 없으며, 민족적 시각을 벗어나서는 크게 공감을 얻을 수 없는, 한반도의 사정에 국한된 지극히 ‘내수용(內需用)’ 명제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⁶⁾ 여기에 더해 민족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 통일의 이념을 한반도의 미래지향적 가치, 보편적 가치로 여길 수 없다는 반성으로 ‘민족주의는 곧 절대선’이라는 규범적 인식이 깨어지고 있다.⁷⁾ 실용주의 답론은 어떤가? 통일편익의 실체는 차치하더라도, 통일의 이익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존재한다는 지적⁸⁾과 함께, 공동체적 가치를 배제하고 모든 것을 경제력으로 획일화하는 현대판 부국강병의 논리를 정당화한다는 점, 그리고 남북한의 경제주의적 관계가 북한의 내부 식민지화(internal colonization), 즉 북한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흡수통합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이 비판을 받고 있다.⁹⁾ 다음, “보편주의의 경우 한반도 상황에서 오직 분단에 의해서만 보편적 가치들이 저해되고 있는가? 그 해결책은 통일이 유일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¹⁰⁾ 또, 보편주의가 통일의 근거로 제시하는 보편적 가치의 확산이 통일과정에서 자칫 ‘보편’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패권적 행태로 치우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¹¹⁾ 그리고 ‘목적 그 자체로서의 평화’를 추구하

6) 이석희·강정인, “왜 통일인가: 세 가지 통일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정치연구』 26-2(2017), 5.

7) 이병수, “통일의 당위성 담론에 대한 반성적 고찰,” 『시대와 철학』 21-2(2010), 366-379.

8) 최준영, “통일의 이익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통일의 필요성,” 117-120.

9) 이병수, “통일의 당위성 담론에 대한 반성적 고찰,” 369-372.

10) 이석희·강정인, “왜 통일인가?,” 13.

11) 정영철, “국가-민족 우선의 통일론에 대한 성찰,” 『통일인문학』 74(2018), 251-252.

는 보편주의 논거에서 수단으로서의 평화가 목적으로서의 통일의 하위 개념으로 남아 있는 이상, 그 평화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면, 반대로 통일이 수단이 되고 평화가 목적이 되었을 때 수단으로서의 통일의 지위도 위협받기는 마찬가지이다.¹²⁾

두 번째 통일논의인 “어떻게 통일해야 하는가?”라는 질문 역시 이론(異論)의 여지가 있다. 남북한은 1948년 별도의 정부를 수립한 이후, 각각 헌법 제4조와 제9조에서 상호 간에 상대방을 통일대상으로 상정하고 통일을 위한 의지를 명문화해 두고 있다.¹³⁾ 큰 틀에서, 분단 이후 남북한은 한쪽의 체제와 이념을 한반도 전체로 확장하려는, 여전히 상대방에 대한 부정을 염두에 둔 국가주의 통일방안을 주창했다.

남북한 통일방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남북한 양측이 정치협상에 의해 통일하는 방안으로, 남북연합제와 연방제, 그리고 영세 중립화 방안이 여기에 포함된다. 남북연합제는 현실적으로 남북한이라는 분단국가와 이질적인 두 체제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통일과도체제로 상정되고 있는 ‘남북연합’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국가들 사이의 느슨한 결합의 한 형태인 국가연합(confederation)과 유사하다. 이런 남북연합제에 대해 북한은 일관되게 연방제로 대응하고 있다. 북한의 공식적 통일방안인 연방제는 1960년 8월 김일성 주석이 8.15 15주년 경축대회 연설에서 처음 제안한 이후, 시기와 대내외적 정세 변화에 따라 그

12) 이석희·강정인, “왜 통일인가?,” 14.

13) 북한의 경우, 2021년 1월 제8차 당 대회에서 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을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으로 수정해, 북한이 통일도, 남조선혁명도 포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조국통일은 북한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자체의 힘으로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킨다,” 「조선신보」(2021년 6월 7일).

내용과 강조점을 달리하고 있다. 연방제는 남북연합제와 달리, 남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이질적 체제의 존재를 허용하는 연방단계를 통일국가의 최종단계로 제안하고 있고, 수정된 연방제인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남북연합제와도 수렴된다. 이외에 남북한 양측의 정치협상에 의한 영세중립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영세중립화 방안이란 통일을 위해 한반도를 영구적으로 중립화한다는 견해이다. 중립화(neutralization)란 자위(自衛)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국에 대하여 무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외국과 군사동맹을 맺지 않고, 외국군의 주둔을 허용하지 않는 의무를 지는 조건으로 국가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보존을 주변국가의 집단적 합의에 따라 영구적으로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세 가지 정치협상 방안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남북연합제의 경우, 한국전쟁이 끝나고도 적대적인 상호작용을 되풀이해온 남북한 사이에서 남북연합이라는 유형적 실체(corporeal entity)를 ‘제도화’하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 경제력 면에서 남한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고, 힘의 불균형이 현저한 상황에서 남북연합제는 북한으로서는 남한으로의 흡수로 이해될 가능성도 있다. 연방제의 경우, 하나의 연방국가에 두 개의 이질체제의 존재를 허용하는 방안은 실현가능성이 낮다. 상대 체제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체제 유지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두 국가가 비록 매우 느슨한 형태라고 하더라도 연방정부를 구성해본 사례는 거의 없다.¹⁴⁾ 더구나 북한은 연방제를 제기할 때, 남한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전제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아무리 구체적인 설명이나

14) 최완규, “남북한 통일방안의 수렴가능성 연구: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북한연구학회보』 6-1 (2002), 17.

논리적 설득을 한다 하더라도 연방이라는 명칭이 남아 있는 한, 그것은 북의 통일방안이고 그것과 공통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북의 통일전선전술에 놀아나는 것이라는 이념적 꼬리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어 있는”¹⁵⁾ 상황을 만들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의 연방제는 남한의 현행 헌법 하에서 위헌성(違憲性)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¹⁶⁾ 영세중립화 방안의 경우, 한반도가 중립국으로 통일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주변 국가들로부터 협정에 의한 영세중립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각국이 한반도 통일에 따른 편익이 상이해 일치된 합의점에 도달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남북한 통일방안 중에서 흡수방안을 살펴보자. 흡수방안은 사회와 경제, 군사체제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일방이 취약한 타방을 흡수하는 사례로, 이를 한반도에 적용해 본다면, 남북한 단일국가의 형성은 무력 전쟁 또는 남북한 내부모순에 의한 정부·국가 붕괴, 이 두 가지 조건에서 어느 일방이 타방에 흡수될 때 가능하다.

흡수방안 중 무력에 의한 통일 가능성은 현실적인가? 한반도는 일방이 타방을 군사력을 이용, 점령하는 방식으로 단일국가를 형성하려고 했던 시도가 이미 실패한 역사가 있다. 또다시 무력에 의해 통일한다는 발상은 어떤 명분과 실리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주변 국가들도 한반도의 현상변경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무력에 의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지난 70년간 건설해 놓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므로 무력에 의한 단일국가

15) 김근식, “연합과 연방: 통일방안의 폐쇄성과 통일과정의 개방성: 6.15 공동선언 2항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19-4 (2003), 165.

16) 제성호,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북한식 연방제 통일의 위헌성,” 「법학논문집」 40-2 (2016), 224-240.

형성은 전혀 생각할 수 없다. 또 하나의 가능성인 내부모순에 의한 정부·국가 붕괴에 따른 단일국가로의 통일은 어떨까? 시기적으로 보면, 세 차례에 걸쳐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었으나, 과도한 가정에 근거한 비현실적이고 희망적인 사고(wishful thinking)에 불과한 것으로 결론 났다.¹⁷⁾ 실재하는 두 국가체제를 일(一) 국가체제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느 일방이 주권을 포기하고 타방에게 흡수되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그러다 보니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흡수통일을 실질적인 통일방안으로 생각하는 견해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¹⁸⁾ 그러나 흡수통일은 가능성과 능력의 측면에서 매우 부정적인 방안이다.¹⁹⁾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1퍼센트라도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는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는 통일로, 이 경우 북한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고, 내부 식민지화의 위험을 높이며, 최악의 경우 한반도를 내전으로 몰아넣어 남북한 모두 회복 불능의 상태로 전화(轉化)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쪽이 패하고 한쪽이 이기는’ 방식의 단일국가 통일은 남북한 모두에게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

2. ‘평화의 과정’으로서의 통일

세 가지 통일담론과 두 가지 통일방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본

17) 안경모, “북한 급변사태 논의의 역설: 간과된 변수로서의 ‘북한,’” 「국제관계연구」 21-2(2016), 43; 정지웅, “북한 붕괴론 논쟁 탐구,” 「통일과 평화」 9-1(2017), 185.

18) 일민국제관계연구원, “‘북한의 미래’ 전문가 설문조사 보고서,” 「국제관계연구」 19-2(2014), 184.

19) 최완규, “남북한 통일방안의 수렴가능성 연구,” 8.

결과, 당장의 체제일원화를 목표로 하는 통일논의는 현실과 동떨어진
다. 따라서 보다 실현가능한 통일논의를 위해서는 통일은 반드시 단일국
가를 형성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는 사고의 전환이 보편화되어야 한다.
이미 2개의 국가와 체제로 정립되어 있는 한반도의 지형을 인정한다면,
통일을 남북한이 단일국가를 수립하는 것으로만 보는 고정관념에 대한
극복이 필요한데, 상대방을 타자화시키고 권력에서 배제하는 단일국가
방식의 평화적인 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²⁰⁾ 이 점에 있어
통일은 “분단 이전 상태로의 회귀가 아니라 서로 다른 역사의 길을
걷고 있는 남북한의 두 종족사회가 새로운 조건과 상황에서 다시 하나의
사회로 되게 만드는 창조작업”²¹⁾이라는 지적은 매우 적절하다.

통일은 분단상태의 현상변경을 최종목표로 하되 평화 이행과정과
장기 공존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²²⁾ 분단이나, 통일이냐의 양자택
일적 관점을 버리고, 하나의 국민국가를 필연으로 전제하는 급속한
통일보다 상당한 기간 평화적 분단관리를 통한 평화공존과 적대관계
종식을 지향하는 방향이 더욱 현실적일 수도 있다. 통일의 최대치
목표를 단일국가 형성보다 상호공존에 두고, 남북협력을 통한 항구적인
평화구축과 공고한 평화프로세스를 제도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가시적
으로 통일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 바람직한 통일은 단일국가 형성을
지나치게 일반화하여 남북한의 체제를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두 체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각 체제가 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체제로 변혁되

20) 이종석, 『분단시대의 통일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8), 18-20.

21) 이상우, “남북한 정치통합: 전망과 과제,” 『국제문제』 24-3(1993), 53. 위의 글,
15 에서 재인용.

22) 정영철, “국가: 민족 우선의 통일론에 대한 성찰,” 247.

어 가면서 최대한 수렴되어 가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이다.²³⁾ 장기적인 평화공존 이후의 한반도 지형에 대해서는 예기치 않은 체제 일원화이든, 복합적 정치공동체이든, 아니면 분단 하의 평화공존의 지속이든 그 우발성(contingency)을 열어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은 통일을 서로 다른 두 개의 국가와 체제가 필연적으로 하나가 되는 결과로만 정의할 때 오히려 갈등과 전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현실주의적 고려 때문이다.²⁴⁾ 또한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에 따라 한반도 평화공존의 가치가 중요하게 주목받고 있고, 무엇보다 북한의 핵개발로 통일의 절대성보다 평화의 상시성으로의 이행이 더 시급하다는 정세인식에 일정 부분에 바탕을 두고 있기도 하다.²⁵⁾ 그리고 남북한이 비교적 큰 이견 없이 합의할 수 있는 공통이익 가능영역(joint interest possibility)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통일은 남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택적 과제라는 인식도 작용하고 있다.²⁶⁾ 물론 이런 입장이 통일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을 하나로 만드는 일회적 사건으로서의 통일은 파국으로 귀결되기 십상이므로, 남북한 모두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평화적이며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사실상의 통일로 진입하자는 취지이다. 통일은 독립적인 두 국가체제를 상호인정하고 각 체제가 더 강한 생존력을 갖도록 발전시키면서 구조·문화적 갈등의 근원을 제거해

23) 김세균, “남북한의 정치통합과 민족공동체 건설의 방향,” 『한국과 국제정치』 16-1 (2000), 222.

24) 이병수, “통일의 당위성 담론에 대한 반성적 고찰,” 379.

25) 정영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190.

26) 최완규, “남북한 통일방안의 수렴가능성 연구,” 9.

나가는, 즉 적극적이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평화(quality peace)”²⁷⁾가 일상화되는 장기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다.

Ⅲ. 평화경제와 ‘관광을 통한 평화’

통일을 적극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구축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그런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3장에서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관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평화구축과 경제협력은 상호 필수불가결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평화와 경제의 상호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경제가 평화에 미치는 영향이고, 다른 하나는 평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전자는 경제가 평화보다 우선하는 경제의 평화적 기능에, 후자는 평화가 경제보다 우선하는 평화의 경제적 효과에 비증을 두고 있다. 하지만 평화와 경제는 어떤 것이 먼저 선행된다는 선후(先後) 관계보다는 상호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때 상승효과가 나타난다.

1. 평화경제(peace economy):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평화경제는 평화와 경제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하고 어떻게 상호 선순환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나온 개념이다. 그 출발은

27) Peter Wallensteen, *Quality Peace: Peacebuilding, Victory, & World Order*(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양질의 평화란 단순히 전쟁의 부재를 넘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전쟁을 다시 초래하지 않는, 혹은 전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시민사회의 참여, 이행기 정의(화해)의 실현, 인간안보, 정책의 지속성, 경제적 재건 등 다섯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양질의 평화가 가능하다.

경제의 평화적 성격에서이다. 경제의 평화적 가치와 경제협력과 상호의존성이 평화에 미치는 영향은 ‘자유주의 평화(liberal peace)’라는 이름으로 사실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²⁸⁾ 보통 국가 간의 관계에서 자유주의는 군사력 중심의 경쟁보다는 시장과 사회·문화적 교류에 의한 협력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자유주의 시각은 일차적으로 칸트의 사상과 접목된다. 칸트는 『영구평화론: 하나의 철학적 기획』에서, 국가 간의 영구평화를 위한 확정조항을 통해 자유주의 시각을 제기한 바 있다. 칸트는 확정조항 제3항에서 보편적 우호와 상업 정신이 인류를 세계 시민적 체제에 점차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하여,²⁹⁾ 자유경제가 영구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보장수단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칸트의 생각을 연장하여, “경제적 상호의존이 국가 간의 협력을 가져온다.”, “자본주의의 확산이 국가 간 무력분쟁을 감소시키고 평화를 낳는다.”, “현재의 경제협력만이 아니라 앞으로 경제협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도 평화를 증진시킨다.”라는 등의 자유주의 명제들이 경험적으로 검증되고 있다.³⁰⁾ 특히, 기능주의는 국가 간 다차원적 협력이 복합적 상호의존의 증가와 통합 정도의

28) 서보혁 외, 『평화경제의 비전과 추진방향: 남북 육상 해양협력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20), 46.

29) Immanuel Kant, *Zum ewigen Frieden. Ein philosophischer Entwurf*, 이한구역, 『영구평화론: 하나의 철학적 기획』 (서울: 서광사, 2008), 38-42. 칸트의 보편적 우호는 “좋은 울타리는 선한 이웃을 만든다(Good fences make good neighbors)”는 또 다른 자유주의 이념과는 대척점에 서 있다.

30) Joseph Nye and Robert Keohane, *Power and Interdependence*(Boston: Little Brown, 1977); Erik Gartzke, “The Capitalist Pea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1-1 (January 2007); Dale Copeland,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War*(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5).

심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전제로, 경제·사회·문화와 같은 하위 정치적 협력 사안이 정치·군사와 같은 고위 정치적 협력으로 확산되는 효과(spill-over effect)가 있다고 피력한다.³¹⁾

평화경제는 평화와 경제의 관계에서, ‘선(先) 경제 후(後) 평화’ 논리보다 평화와 경제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승효과를 추구한다. 평화경제는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의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군사적 대결보다는 협력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경제평화 설명방식이나 경제협력이 비(非)영합적인 기능통합을 가져온다는 기능주의 발상과도 상이하다. 평화경제에 대한 개념 정의는 매우 다의적이거나,³²⁾ 용어 구조상으로 보면, ‘평화’와 ‘경제’의 결합어로, 평화가 경제협력을 확보해주고 동시에 경제협력이 평화를 유지해준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³³⁾ 평화 없이는 경제개발을 이룰 수 없고, 경제개발을 이루지 못하면 평화가 위협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31) 전재성, “한반도 통일에 관한 이론적 고찰,” 『통일과 평화』 1-1 (2009), 86.

32) 평화경제 개념에 대해서는, Walter Isard, “Peace Economics: A Topical Perspective,” *Peace Economics, Peace Science, and Public Policy*, 1-2 (1994), 9-11; Jenny H. Peterson, *Building a peace economy? Liberal peacebuilding and the development-security industry*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14), 5; Jurgen Brauer and Charles H. Anderton, “Conflict and Peace Economics: Retrospective and Prospective Reflections on Concepts, Theories, and Data,” *Defence and Peace Economics*, 31-4 (March 2020), 1-22; Raul Caruso, “On the Nature of Peace Economics,” *Peace Economics, Peace Science and Public Policy*, 16-2 (December 2010), 2; 홍성국, 『평화경제론: 분단비용, 통일비용, 그리고 평화비용』 (서울: 다해, 2006), 18 참조.

33) 윤황, “평화경제를 통한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의 대전략 구상,” 『평화학연구』 14-5 (2013), 35.

부언하면, 평화경제는 경제협력과 평화구축의 유기적 결합과 역동적 상호관계를 시도한다. 평화경제는 경제협력을 통해 평화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평화를 통해 장기적인 경제협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본다. 경제를 통한 평화구축과 평화를 통한 경제협력의 발전을 동시에 상정하고 있다. 평화경제는 평화와 경제의 이중주(二重奏)이며, 평화와 경제의 상생작용, 그리고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즉 ‘평화를 위한 경제, 경제를 위한 평화’를 지향한다.³⁴⁾ 평화경제는 국가 간 교역의 증가는 경제적인 이득을 창출하고 심각한 분쟁은 교역의 증가에 장애가 된다는 판단 하에 모든 국가는 교역 상대국가와 전쟁을 억제한다고 본다.³⁵⁾ 국가 간 교역의 증가는 상호의존성 증대와 경제적 이득 창출을 가져오고, 충돌 및 도발과 전쟁 가능성 감소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평화를 확보한다는 것이다.³⁶⁾

역사적으로 볼 때, 평화경제의 전신(前身)은 1950년 5월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를 제안한 슈망플랜(Schuman plan)이다. ECSC의 경험은 주로 경제협력이 확산 효과를 통해 결국 정치통합으로 이어진다는 초국가적 기능주의(supranational functionalism)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사례로 활용되어 왔으나,³⁷⁾ 슈망플랜 이후 유럽통합이 실현되는 1990년대 초까지 정치

34) 조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이론적 틀: 평화경제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통일연구원 개원 15주년 기념 국내학술회의 (2006. 4. 7), 1.

35) Katherine Barbieri and Jack S. Levy, “Does War Impede Trade? A Response to Anderton & Carter,” *Journal of Peace Research* 38-5 (September 2001), 619-620.

36) 윤황, “평화경제를 통한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의 대전략 구상,” 36.

통합과 경제통합의 관계는 일방적이기보다는 상호 연동적이었음을 고려한다면 ECSC의 경험은 경제협력을 통해 평화를 실현하고, 평화정착을 통해 경제적 협력을 극대화하는 ‘평화와 경제의 순순환’의 전형성(典型性)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³⁸⁾ ECSC의 경우, 경제적 통합이 중요한 배경이 되어 추진되었지만 그 성공은 경제적 이해관계보다는 궁극적으로 정치적 동기에 기인했다.³⁹⁾ ECSC에서 시작하여 유럽공동체(EC)를 거쳐 유럽연합(EU)으로 발전하는 1990년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 정치적 안정이 경제적 통합을 더 견고하게 유지하는 요인으로 작동했다. 결국 ECSC를 통한 유럽통합의 경험은 경제협력이 평화적 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평화적 환경 조성이 경제협력 확대에 기여하는 평화경제의 역동을 노정해 준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경제와 안보는 분리된 것이 아니다. 적대하는 상대와의 경제협력은 그 자체로 중요한 ‘국가안보재(security goods)’이다. “경제협력을 통해 상호 위협감소, 평화적 공존의 가치 인식, 평화의 제도화, 궁극적으로 안전보장을 진전시킬 수 있는, ‘함께하는 포괄적 안보’와 ‘지속가능한 공동번영’을 아우르는” 평화경제⁴⁰⁾의 효과를 ECSC 경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37) 김승렬,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생산의 연대’?: 프랑스의 유럽석탄철강공동체 계획(슈만플랜)의 기원과 의미(1945-1950),” 『프랑스사 연구』 6 (2002), 33.

38) 김연철, “한반도 평화경제론: 평화와 경제협력의 순순환,” 『북한연구학회보』 10-1 (2006), 55.

39) 김승렬, “유럽통합 초기(1945-1957)에 있어서 ‘기능주의(functionalism)’에 대한 논쟁,” 『EU학 연구』 5-1 (2000), 20.

40) 홍민 외, 『북한의 발전전략과 평화경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서울: 통일연구원, 2020), 26.

이상의 평화경제에 대한 논의는 한반도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상기했듯이, 한반도 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은 적극적이고 지속 가능한 양질의 평화구축을 선행하는 일이다. 그리고 평화경제의 역동은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면 평화정착을 통한 경제협력 활성화와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남북관계에 적용해 보면 대북 경제협력은 한반도 적대관계 종식과 평화환경 기반을 조성하고,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이 지속되어야 남북경제협력의 확대·심화도 가능하다. 남북한의 경제협력과 정치·군사적 관계개선은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이다.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의 가장 큰 추동력은 북한을 평화적 협력 구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치적 목적을 상정하지 않는 강력한 경제적 유인체계를 북한에게 제공하는 것이다.⁴¹⁾ 문제는 비용이다. 북한에 강력한 경제적 유인체계를 제공하려면 상당한 평화비용이 소요된다. 평화비용은 통일비용⁴²⁾의 일부로, 통일 이전 한반도 평화유지와 정착을 위해 남북경제협력 및 대북지원에 소요되는 평화비용은 소모성 성격의 분단비용과는 달리 통일을 위한 선(先) 투자적 성격을 지닌 일종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 할 수 있다.⁴³⁾

41) 조한범, 『국제 평화경제 사례와 한반도』(서울: 통일연구원, 2020), 43.

42) 통일비용은 통일에 따른 남북한 간 격차 해소 및 이질적인 요소를 통합하는 데 소요되는 체제통합 비용을 의미한다. 통일비용은 분단비용과 평화비용을 포함하는데, 분단비용은 한반도 분단의 결과인 남북한 간 대결과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무형의 지출성 비용을, 평화비용은 한반도 전쟁 억지 및 해소,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拂하는 모든 형태의 비용을 의미한다. 통일비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신동진, 『통일비용에 대한 기존연구 검토』(서울: 국회예산정책처, 2011) 참조.

남한의 평화비용의 지출은 그 규모 면에서 매우 낮은 수준이나, 평화비용에 대해 비용부담을 강조하는 우려의 시각과 미래지향적 적극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뚜렷하게 양분되어 있는 실정이어서⁴⁴⁾ 평화경제 의미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감대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2. 관광을 통한 평화(peace tourism): 북한 관광협력

평화경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이행기제는 관광이다. 관광은 평화를 위한 관광과 관광을 통한 평화가 선순환함으로써 평화경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의 중심축이다.⁴⁵⁾ 국가 간 교류확대를 통하여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평화산업(peace industry)’으로서, 관광의 중요성은 이미 그 역할의 가치와 실효성이 충분히 입증되어 왔다.⁴⁶⁾ 1967년

43) 김영운 외,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통일정세분석 2005-17』(서울: 통일연구원, 2005), 8.

44) 김연철, “한반도 평화경제론: 평화와 경제협력의 순선회,” 61.

45) 서보혁 외, 『평화경제의 비전과 추진방향: 남북 육상 해양협력을 중심으로』, 186.

46) Sune B. Pedersen, “A Passport to Peace? Modern Tourism and Internationalist Idealism,” *European Review* 28-3(June 2020); Louis J. D’Amore, “Tourism: A Vital Force for Peace,” *Tourism Management* 9-2(June 1988); Barbara D. Steffen, “Tourism as an Instrument of Peace Is Cross-cultural Preparation the Answer? Rationale and Methodology,” *Visions in Leisure and Business* 16-1(1997); Richard W. Butler and Baodi Mao, “Tourism between Partitioned States: The Need for a New Conceptual Approach,” *Korean Journal of Hotel Administration* 1-1(1999); Samuel Seongseop Kim, Bruce Prideaux and Jillian Prideaux, “Using Tourism to Promot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nals of Tourism Research* 34-2(April 2007); Abraham Pizam, Aliza Fleischer and

국제연합(UN)이 관광을 ‘평화로 가는 여권(passport to peace)’으로 호명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관광은 일차적인 경제적 효과 외에도, 서로 다른 국가 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고 긴장을 완화하며 적대감을 해소함으로써 평화의 일상화 촉진에도 크게 기여하는 원동력이다. 이는 체제전환을 거친 구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은 물론, 현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베트남, 쿠바도 예외는 아니다.⁴⁷⁾

1990년대 초 구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우 체제전환 시기에 개혁·개방을 통해 가장 우선적으로 관광시장을 육성했는데, 외부 자원유입, 내부 고용효과, 국제 수지개선,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적은 부담, 자원 절약적·환경 친화적 특성 등의 이유 때문이었다.⁴⁸⁾ 이들 국가들에게 관광은 투자유치와 더불어 외화수입을 증대시키고 서비스 분야에서 국민소득을 높이며 국가 재정상 적자보전에 기여하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2000년 이후 중국과 대만의 경우는 관광

Yoel Mansfeld, "Tourism and Social Change: The Case of Israeli Ecotourists Visiting Jordan," *Journal of Travel Research* 41-2(November 2002); Yingzhi Guo, Samuel Seongseop Kim, Dallen J. Timothy and Kuo-Chang Wang, "Tourism and reconciliation between Mainland China and Taiwan," *Tourism Management* 27-5 (October 2006); Caroline Anson, "Planning for Peace: The Role of Tourism in the Aftermath of Violence," *Journal of Travel Research* 38-1(August 1999); 강남국, "남북통일을 향한 관광교류의 전개방향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15-1(2000).

47) 박현선, "남북관광교류협력이 북한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교류협력 과제," 「북한연구학회보」 9-1(2005), 208-209.

48) 윤인주, "김정은 시대 북한의 관광산업 평가 및 전망," 「북한연구학회보」 19-1(2015), 97.

이 경제적 이익 외에도 양안(兩岸) 관계를 호전시키는 동력으로 작동했다. 중국과 대만은 정치·군사적 긴장관계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반관반민(半官半民) 주도로 관광교류가 오히려 증가하면서 갈등과 물리적 충돌을 회피하고 안보상황에 대한 현상유지를 선호했던 사례가 있다.⁴⁹⁾

관광은 북한의 경우도 평화경제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과거 북한은 관광을 비생산적인 생활 양태로 인식·비판하는 입장이었으나, 1980년대 들어 관광을 외화수입 증대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관광업 발전을 위해 국가관광 체계를 확립하는 등 국가주도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⁵⁰⁾ 1991년 9월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발표 후인 1994년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을 발표하고 나진-선봉을 국제관광특구로 개발하고자 했다.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외화획득이라는 목적 외에도, 나진-선봉지역이 수도 평양과 떨어져 있어 전면적 개방에 동반되는 정치체제 변화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다.⁵¹⁾ 2002년 7월 ‘7·1경제관리개선조치’ 발표 후에는 ‘금강

49) 김진호·김평선·신민석, “관광을 통한 평화(Peace Tourism)의 창출: 중국-대만 관광교류 사례가 한반도 평화에 주는 함의,” 『평화학연구』 9-3(2008), 11-17.

50) 북한이 1984년 9월 「조선합작경영법」(朝鮮合作經營法) 제정, 1986년 5월 국가관광 총국 발족(1953년 8월 조직된 조선국제여행사 후신), 1987년 6월 세계관광기구 가입 등 관광사업을 적극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김정일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민주주의 캄보자 주석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1985. 5. 2),” 『김정일 선집』 8(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참조.

51) 신정화,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의 변화: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4-2(2010), 143.

산관광지구법'을 채택하고 2003년 9월부터 남한과의 합작에 의한 금강산 '육로'관광을 본격화하고, 이후 개성 및 백두산 관광으로까지 확대했다. 이 시기 북한 관광은 경제회복에 필요한 외화 확보 차원에서, 관광에 의해 자본주의적 풍조가 주민들에게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통제관리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하다보니, 전반적인 정책 전환을 모색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⁵²⁾ 아울러 평화에 미친 공헌도는 낮으며 확산 효과도 미약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도 있다.

북한은 2013년 3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관광을 통한 경제 회복과 부국' 의지를 표명한 이후,⁵³⁾ 중앙급 경제특구 및 지역별 맞춤형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호를 통해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설치를 선포한 이후에는 해외관광 마케팅에 적극적이다. 관광산업을 북한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하고, 법·제도 정비와 전문인력 양성, 대외홍보 강화와 관광상품의 다변화, 시설·교통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전반의 변화 등 자구책도 마련했다. 북한의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최상위 조직은 국가관광총국으로, 그 하부 실무조직으로는 각종 국가여행사가 있으며 관광수입은 당 38호실에서 관리하고, 관광객 수는 외무성과 보위부의 통제를 받고 것으로 알려져 있다.

52) 위의 글, 154.

53)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하신 보고," 『로동신문』(2013년 4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은 "적대세력들의 제재와 봉쇄책동을 짓부시고 경제강국 건설에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아야" 하며, "나라의 여러 곳에 관광 지구를 잘 꾸리고 관광을 활발히 벌리며 각 도들에 자체의 실정에 맞는 경제개발구들을 내오고 특색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선국제여행사(international travel agency), 청소년여행사(youth travel agency), 체육여행사(athletes travel agency) 등 3대 국가여행사는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관광을 통한 외화획득이 강조되자 다양한 국가 기관과 지역 기관이 산하 여행사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⁵⁴⁾

현재 북한은 대규모 관광시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등 중양급 관광지구와 지방급 관광개발구, 관광분야 개발 계획이 포함된 12개의 경제특구·개발구 등을 중점적으로 개발하여 관광산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관광산업에 주력하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과거 북한은 다양한 관광 상품을 통해 외화수입을 증대하고 자국에 대한 부정적인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는 체제선전 효과를 의도해 왔었다.⁵⁵⁾ 마찬가지로 김정은 위원장 시기 관광산업에 주력한 이유는 내부 자원 동원방식의 자력경제의 한계와 핵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관광산업이 매우 유효한 외화 획득 수단이라고 판단해서이다. 북한은 관광을 발전시켜 국가·사회건설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하며, 국가 경제발전과 인민 생활향상에 있어 관광이 차지하는 의의를 부각시키고 있다.⁵⁶⁾ 이는 외화 획득을 통해 저성장 지속과 경제제재 장기화 국면을 돌파하고

54) 신정화,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의 변화,” 115.

55) 채재득, “관광업과 그 경제적 특성,” 『경제연구』 91(1996), 32-36.

56) 전영명, “사회주의관광업의 본질적 특성과 역할,”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493(2015), 74; 박명순, “관광자원 개발리용에 대한 통계적 연구에서 나서는 문제,” 『경제연구』 168(2015), 37-40; 박성영, “관광재산이 사회경제발전에서 가지는 의의,” 『경제연구』 168(2015), 40-41.

북한식 자력갱생을 위한 출로를 모색하려는 시도로 판단된다. 또한 관광 활성화를 통해 북한의 폐쇄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정상국가(normal state)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의도도 반영된 듯하다. 이외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실용주의적 리더십과 서구 문화의 경험도 북한이 관광산업에 주력하는 데 영향을 준 요인이라는 평가들이 있다.⁵⁷⁾

김정은 시대 북한 관광산업의 전망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의적이다. 관광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 매우 중요한 국정목표로 설정되어 있지만 선결과제들이 상당하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북한비핵화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이다. 관광 자체는 대북제재 사항이 아니지만, 포괄적으로는 상당 부문이 제재와 관련되어 있다. 때문에 체제 위협요소는 감소시키면서 개방과 단절이 반복되는 ‘외국인 국내관광(inbound tourism)’이 주로 중국과 러시아 대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는 입장이 우세하다.⁵⁸⁾ 김정은 위원장의 적극적인 관광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전략에는 ‘안보 우선, 경제 차선’ 논리가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⁵⁹⁾ 전면적인 개방보다는 부분적인 개방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마저도 유보적으로 돌아설 경우의 수도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다.

반면, 북한의 변화에 강조점을 두는 전망도 있다. 무엇보다 관광산업을 통한 경제 희생과 경제 강성국가 건설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57) 정유석, “김정은의 현지도와 관광정책,” 『통일문제연구』 28-2 (2016), 185.

58) 박정진, “국제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본 김정은 시대의 북한관광 변화 연구: 관광객 유치 해외 공급망과 외래 관광객 유치 여행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32-6 (2019), 78.

59) 이승욱,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특구전략: 영역화, 분권화, 그리고 중국식 개혁개방?,”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9-1 (2016), 137.

의지는 확고하다. 2013년 3월 ‘원산·금강산 지구 관광 활성화’를 선언한 이후 지금까지 이 같은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전방위적인 경제특구·경제개발구 정책 추진으로 북한 전역이 관광지대화 하고 있다. 특히 2018년 11월 종합적으로 발표된 28개 경제특구·개발구 중에서 18개의 관광개발이 포함된 특수경제지역을 지정하고 국가차원에서 관광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관광산업의 확대는 단순히 외화획득과 북한의 경제난을 타개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⁶⁰⁾

특기할 만한 점은 북한이 ‘외부 의존형’에서 ‘자기주도형’ 방식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10월 김정은 위원장은 금강산 현지도에서 “관광사업을 남측을 내세워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한 바 있고,⁶¹⁾ 평양 양덕군 온천관광지구에서는 “우리식, 조선식” 건설에 대한 호감을 강하게 표시하기도 했다.⁶²⁾ 이를 대북제재와 관광 중단에 따른 탈출구 모색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나 북한의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로 읽는 것이 더 타당하다. 김정은 시대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북한 상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온정주의(paternalism)’에 대한 기대를 배격하고, 사대와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로 규정, 외부원조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를 건설하는 것이 발전의 길임을 강조하고 있다.⁶³⁾ 국제사회의 자비와

60) 윤인주, “김정은 시대 북한의 관광산업 평가 및 전망,” 113-115.

61) 「조선중앙통신」(2019년 10월 23일).

62) 「조선중앙통신」(2019년 10월 25일).

63) 김지영, “대의 원조에 대한 북한의 인식 연구: 로동신문 기사분석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연구」 11-3(2019), 34.

‘지갑(purses)’에만 호소하지 않고 개발협력을 통한 당당한 국익증진을 더 선호하면서 북한 나름의 자활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관광협력에 대해 이익균형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관광으로 외화를 획득하는 만큼 관광협력 투자에 대한 안정적인 보상(incentive)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한 바 있다.⁶⁴⁾ 문제는 ‘현재의 경색된 한반도 지정학적 질서와 환경이 호전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해제되고 체제보장에 대한 여건만 조성된다면, 그리고 북한이 자위(自衛)상 국경을 봉쇄하게끔 한 코로나 19(COVID-19) 대유행(pandemic) 상황이 호전된다면 북한 관광산업은 더욱 활기를 띠 것이다.

현재의 코로나19 대유행이 안정 국면으로 들어가고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가 해제되는 등 한반도 지정학적 환경에 변화가 생긴다면, 북한 관광협력은 평화경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이행기제로서 작동하게 될 것이다. 국면이 전환되고 북한과의 협력이 더욱 진전되는 시기가 왔을 때 남한은 북한과의 적극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에게 일방적인 협력을 제안하기보다는 호혜적 입장에서 협력의 대등성(對等性)을 확대해야 한다.⁶⁵⁾ 남한은 협력관계를 더 이상 주도권을 갖기 위한 경쟁관계로 이해하지 않고, ‘시혜성 원조’가 아닌 ‘개발협력’의 관점으로, 공동의 이익과 목표를 위해서 북한을 동등한 협력의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 평화경제의 상호 편익을 확보하면서

64) 신용석·최정은, 『신남북 관광협력의 정책방향과 과제』(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56.

65) 강재연, “김정은 시대 관광산업의 국제화전략과 협력의 선택적 이중구조” 『한국동북아논총』 95(2020), 119.

지속가능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이 체제유지에 위협적인 접촉을 회피하고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경제적 관계를 통제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현재의 정책방향에서 급선화하리라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무리이다. 이 점에 있어서, 남한이 북한과의 진정한 의미의 화해와 평화를 이룩하기 원한다면 연성적 접근을 시도하면서 남북관계의 신뢰 구축과 소통, 그리고 안정적 발전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체제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북한이 남한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대해 언제든지 내부단속을 위해 긴장을 조성하고, 평화경제의 규칙을 일방적으로 무시할 여지는 항상 내포되어 있어서 관광협력의 딜레마가 상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경우, 북한지역에 선(先) 투자된 자산 외에 별도로 발생한 손실조차도 평화비용으로 인정하고 상호교류의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평화경제의 관점이다.

IV. 한국교회의 과제: 북한지역 기독교 사적지 관광협력

4장에서는 ‘북한지역 기독교 사적지 관광협력’(이하, 사적지 관광협력)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한반도 통일의 당위와 현실 사이에서, ‘통일과 평화의 분기(分岐) 사이에서 한국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평화경제적 관점과 접맥(接脈)한 것이 사적지 관광협력이다. 일반적으로 사적(史跡)은 인위·자연적으로 형성된 공동체적 산물 중에서 역사·예술·학술적 가치가 있는 정신적 자산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관광산업의 바탕을 이루는 문화콘텐츠이기도 하다. 여기에 제안한

사적지 관광협력은 해방과 한국전쟁 이전 북한지역에 위치했던 북한교회 사적⁶⁶⁾ 가운데 한국교회 역사적으로 중대한 사건과 관련된 장소(지역)만을 특정해 관광자원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북한당국과 한국교회가 협력하는 구상이다. 다만, 제안한 구상은 탐색적 수준이므로, 추후 전반적으로 폭넓은 조사연구, 토론과 협의를 통해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형태의 협력 방향과 내용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두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사적지 관광협력 방향

1) 가치와 성격

북한지역은 한국교회사에 있어서 핵심 지역이다. 한국교회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관련되는 공간, 다시 말해 한국교회사에서 나타난 일련의 경향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그 경향을 대표하면서 그 경향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사건과 깊이 연관된 공간이 북한지역이다. 한반도에 기독교가 전파된 길은 크게 두 갈래로 중국과 만주로부터의 북방 전래와 일본과 미국으로부터의 남방 전래로, 이 중 전자가 후자보다 시기적으로 앞섰기 때문에 북한지역은 기독교를 먼저 접촉하여 수용하였다.⁶⁷⁾ 하지만 한국전쟁을 계기로 반미감정이 반기독교적 정서

66) 사적에는 역사적 장소 외에도, 유적지, 구역, 유구, 건축물, 구조물 등이 포함된다. 사적 판단 시에는 중요한 정보의 보유성, 시대의 대표성·희소성 및 상징성, 역사적 사건성, 그리고 역사적 인물성 등의 기준이 적용된다. 이 중에서 역사적 사건성이란 과거의 중요한 사건, 활동, 발달 등과 깊은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기준을 말한다.

6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북한교회사 집필위원회, 『북한교회사』(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39.

로 연결되고, 전사회적으로 탈교(脫敎) 현상이 유행처럼 조성되면서, 북한지역 기독교는 소외되고 위축되었다.⁶⁸⁾ 지금은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하, 조그련)과 평양신학원 그리고 봉수·칠곡교회, 그리고 520개 가정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⁶⁹⁾ 반종교적 이념을 지닌 정권의 세속적 정치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통제형 공인종교’로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대세적이다.⁷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적지 관광협력의 가치는 매우 포괄적이다. 잊힌 북한지역 기독교 자취를 기억·복원해내는 그 자체의 가치 외에도, “역사적 가치의 보존 및 활용을 도모하는 것은 한 국가, 한 민족의 책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공동책무”⁷¹⁾라는 사적 지정제도 취지에도, 그리고 ‘그 누구도 뒤에 남겨지지 않는(No one behind)’ 세상을 만들려는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가치에도 부합한다고 본다. 또한 사적지 관광협력은 1990년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서 한국교회가 이념과 신학적 입장 차이를 극복했던 연합과 연대를 다시 재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관광이 가진 ‘벌면서 배우는(learning while earning)’ 효과를 볼 때, 사적지 관광협력이 북한의 관점에서는 관광을 통해 국가발전에 필요한 외화를 벌어들이는 기회이겠지만, 한국교회 입장에서는 한국교회를 배우는 기회를 북한에 제공한다는 의의도 있다.

성격에 있어, 북한에 대한 한국교회의 지원이 일방적인 시혜나

68) 최재영, 『북녘의 교회를 가다』 (서울: 동연, 2019), 498.

69) 위의 글, 499.

70) 윤황, “북한의 종교정책과 종교실태를 통해 본 종교국가화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8-2 (2004), 234.

71) 김창규 외, 『사적 지정제도의 개선방안연구』 (대전: 문화재청, 2009), 11.

원조 차원에서가 아니라 북한과의 동반자 관계(partnership)를 통해 실천되어야 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사적지 관광 ‘협력’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교회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원조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해, 때로 북한에 대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가를 두고 대립하면서 상대와의 동반자 관계 형성에 미온적이었던 면이 없지 않다. 국가 간의 성공적 개발협력 활동의 주요 원칙 중 하나가 동반자 관계 형성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한국교회는 사적지 관광협력의 성격이 ‘원조’가 아닌 ‘협력’임을 인식하고 신뢰구축과 소통, 동반자 관계 형성을 최우선시 해야 될 것이다. 추가해서, 협력이라는 성격이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는 ‘원조’에 대한 북한의 거부감을 배려해서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의 원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1950년대를 빼고는, 모든 시기 원조를 제국주의와 신식민주의 수단으로 규정했고, 이러한 시각은 지금까지 일관적인 북한당국의 원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다.⁷²⁾ 한국교회는 북한의 특수성을 인지하고, 사적지 관광협력에서 원조가 아닌 협력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72) 김지영, “대의 원조에 대한 북한의 인식 연구,” 35. 자세한 내용은, “자주권은 원조와 바꿀 수 없다,” 「로동신문」(2003년 3월 19일); “기만적인 ‘민주주의’와 ‘원조’ 타령,” 「로동신문」(2007년 4월 11일); “압력을 노린 ‘원조’ 중지 늘음,” 「로동신문」(2009년 2월 4일); “동반자 관계가 과연 성립될 수 있는가,” 「로동신문」(2011년 6월 12일); “미국의 원조는 세계재패를 노린 침략의 도구,” 「로동신문」(2014년 6월 6일);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로동신문」(2016년 5월 7일);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에 대한 환상은 곧 파멸,” 「로동신문」(2018년 2월 24일); “미국의 ‘원조’는 내정간섭과 지배의 수단,” 「로동신문」(2018년 4월 10일) 참조.

2) 가능성과 한계

사적지 관광협력은 ‘과연 북한에게 적극적 유인이 될 수 있을까?’의 여부를 통해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우선 사적지 관광협력은 김정은 위원장의 3대 역점 관광개발(삼지연, 원산·금강산, 양덕온천)처럼 국가적 비중이 있지도 않다. 그러나 오히려 북한의 3대 역점 관광개발 사업처럼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대규모 재정부담이 없다는 점이 매력적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 투자로도 외화획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북한당국에 강조할 수 있다.

북한이 관광의 산업화를 추진하는 추세는 사적지 관광협력 가능성에 있어 긍정적이다. 북한이 2013년 김정은 위원장의 관광사업 육성 지시 이후, 관광을 전방위적인 국가산업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앞서서도 밝혔다. 주지할 점은 관광대상과 지역, 상품의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광대상의 경우, 기존의 중화권 중심에서 서구권으로 관광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아직까지 북한이 관광객 유치에 주력하는 국가는 단연 중국이기는 하지만, 서구권까지 대상국가를 확대하여 해외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광지역도 평양, 남포, 개성, 판문점, 금강산, 묘향산 등 획일적인 편이었으나, 경제특구·경제개발구를 거점화하여 북한 전역을 단계적으로 관광지대화 하고 있다. 관광상품에 있어서도 일정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자연경관이 라는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구경시키는데’ 방식에서 벗어나 건축, 낚시, 골프, 윈예, 스포츠, 사격, 질병치료, 노동체험, 생태관광 등 다양한 소재를 테마로 한 상품들을 개발하고 있다.⁷³⁾ 특이하게 불교 사찰순례

73) 윤인주, “김정은 시대 북한의 관광산업 평가 및 전망,” 108-113.

를 테마로 한 관광상품까지 판매하고 있다.

사적지 관광협력의 경우, 북한의 반기독교적 정서가 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나, 이 역시 결과를 단정하거나 예단하기는 어렵다. 시기별 종교정책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북한은 정치적 판단에 따라 종교에 대한 최종적 입장을 달리하고, 종교정책 변화의 동인(動因)이 ‘정치’에서 ‘경제’로 이동하는 특징을 보였다.⁷⁴⁾ 그 결과 1980-90년대 한국교회와의 교류를 수용하고 협력을 확대했던 전력(前歷)이 있다. 이 과거 경험은 북한과 한국교회의 협력을 유인·제도화할 수 있는 공동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사적지 관광협력은 인권문제와도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이 발상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국제사회에서 인권은 이미 국제정치의 상수(常數)로 자리 잡았고,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북한 인권문제의 정치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북한당국은 국제사회의 인권 압력에 거부(rejection), 역공(backlash), 선택적 협조(selective accommodation), 국내법 개정(legislation)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나⁷⁵⁾ 국제사회의 비난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 이런 중에 여전히 자유권과 관련해서는 주목할 만한 인권개선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2019년 5월 제3차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에서 보듯이, 북한이 이전과는 달리 인권 사안에 대해 비교적 열린 자세를 보이려는 변화는 감지된다.⁷⁶⁾ 이참에 한국교회는 북한이 사적지 관광협력에 참여함으로써

74) 정영철, “북한 종교정책의 변화와 현재,” 『남북문화예술연구』 3(2007), 46-64.

75) 이원웅, “국제사회 인권압력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비판적 평가,” 『국제정치논총』 47-1(2007), 223-228.

76) 김수경, “북한에 대한 제3차 보편적 정례검토(UPR) 평가와 북한인권 증진 방향,”

써 나름대로 인권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여 국제적 평판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능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평화경제 개념이 수용되지 못한 채 고립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점이 가장 근본적인 한계이다.⁷⁷⁾ 한국교회의 대북 인식도 변수다. 북한이 협력을 통해 얻은 대규모 현금(bulk cash)은 대량살상 무기개발에 사용되어, 남한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데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고, 한국교회의 대북 협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동한다. 설사 사적지 관광협력이 성사되더라도 평화경제에서 말하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북한당국과 한국교회 간의 갈등과 소통의 어려움으로 ‘아시아 패러독스(asia paradox)’ 현상처럼 이해당사자 간 경제적 상호의존이 끊임없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대립이 전개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도움은 주지 못할지언정 최소한 해는 끼치지 말아야 한다(do no harm)’는 무해성(無害性) 원칙마저 부인되고, 최악의 경우 관광협력에 대한 최종합의에도 불구하고 철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또한 금강산 관광에서처럼 북한당국이 북한주민이 살고 있지 않은 비거주 지역으로 사적지 관광협력 지역을 제한한다면, 실제 북한주민 거주 지역에 위치해 있는 중요한 사적지가 제외되어 한국교회의 평화비용 효과는 상쇄된다.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9-09 (2019. 5. 22), 6-7.

77) 이호영, 『다자기구에서의 ‘평화’와 ‘경제’의 개념 및 남북협력에 대한 시사점』 (서울: 국립외교원, 2021), 3-4.

2. 사적지 관광협력 내용

사적지 관광협력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한국교회는 교단이나 교단연합체가 북한 조그련을 우선적으로 접촉·대화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조그련의 위상이나 협력내용의 성격으로 보아,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혹은 북한 외래관광 공급망과도 일정 부분 협력할 필요가 있다. 북한 외래관광 공급망은 국가관광총국과 산하의 3대 중앙급 여행사가 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지방급 여행사들이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⁷⁸⁾ 이들 여행사들은 기본적으로 조선국제여행사의 지방 분사이자 산하기구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띤다. 일반적으로 단체관광의 경우, 40여 개의 외국여행사가 판매하는 관광상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개별여행의 경우에는 북한여행사에 직접 연결되어 관련 내용과 서비스를 제공받기도 한다.⁷⁹⁾

한국교회의 교단이나 교단연합체는 조그련을 통해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혹은 조선관광총국과 사적지 관광협력에 대한 실무적인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여건이 조성되면 양해각서 체결 이전, 한국교회는 북한지역 기독교 사적지에 대한 사전조사를 해야 한다. 북한지역에서 실사할 기독교 사적지 개요는 <표 1>과 같다. <표 1>의 사적지 개요는 남한 관점으로, 북한교회사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 대표적인 사적지를 최소화한 것이다. 북한지역 기독교 사적지 중에는 북한이 해방 이후, 건국과

78) 강채연, “김정은 시대 관광산업의 국제화전략과 협력의 선택적 이중구조,” 114.

79) 박정진, “국제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본 김정은 시대의 북한관광 변화 연구,”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과정에서 부정적으로 선전한 사례⁸⁰⁾와 혁명 사적지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⁸¹⁾도 있어 실사 과정에서 북한당국과의 신중한 조율이 필요하다. 북한이 항일운동에 대해서는 매우 우호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관 사적지를 향후 추가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유의할 것은, 북한당국과 한국교회가 합을 맞추기 위해서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고려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적당한 주의의 부족에서 생기는 파열음을 사전에 차단하여 예측가능한 관계로 발전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표] 북한 기독교 사적지 개요

지역	사적지	교회사적 의의
중국 (만주)	단둥 고려문	1867년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윌리엄슨(Alexander Williamson) 선교사가 고려문을 통해서 중국을 오가는 한인들에게 전도 시작
	심양 문광서원	1982년 쪽복음서(누가·요한복음) 간행. 1887년 신약성경 간행
	집안 이양자교회	1898년 로스(John Ross)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은 한인들이 서간도에 세운 최초의 한인교회
	용정·도문 명동교회	1909년 한인들의 노력으로 설립. 간도로 망명한 민족주의자들이 1908년 명동학교를 세우고 집단 개종
함경도	함흥 함흥영생학교 제혜병원	함흥은 1903년 캐나다장로회의 중심적인 선교지. 1903년과 1907년 설립한 함흥영생여학교와 남학교는 관북 최고의 명문학교. 1913년 제혜병원 설립
	성진 제동병원	1907년 캐나다장로회의 의료선교 거점
의주		1885년 최초의 자생교회인 의주 신앙공동체 마련. 1889년 4월

80) 대표적으로, 제너럴 셔먼호(The General Sherman) 사건의 경우 런던선교회 소속 토머스(Robert J. Thomas) 선교사를 통해 북한지역에 기독교가 전파된 중요한 역사이지만, 북한은 이 사건을 '미제국주의자의 첫 조선 침략'으로 규정한다.

81) 북한은 양강도 포평교회와 황해도 은율읍교회의 경우, 김일성 주석의 부친 김형직의 항일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 선전하며 혁명 사적지화 하고 현재도 보존하고 있다.

평안도			27일 언더우드가 의주지역 33인의 교인들에게 수세
	신의주		1933년 성결교 신의주동부교회 설립. 1937년 감리교 신의주교회 설립
	선천	선천 선교지부	1901년 선천 선교지부 설치. 평북지역을 7개의 순회구역으로 나누어 전도활동(선천은 ‘한국의 예루살렘’)
		신성학교	105인 사건(1910-1911년). 기독교와 일본 세력의 대립, 항쟁
		선천읍 남예배당	1912년 평북노회 조직
	강계	계례지병원	1908년 북장로회 강계선교부 개설. 1911년 케네디병원(桂禮知病院) 정식 개원
정주	정주교회	러일전쟁 때 일본군 병동으로 점령	
평양	널다리교회	평양 최초의 교회. 한석진의 사랑방에서 한석진과 마펏(Samuel A. Maffett)의 주도하에 정기적인 예배와 학습 진행	
	장대현교회	길선주 목사가 평양에서 조선 최초로 새벽기도회 시작. 1907년 9월 독노회(獨老會) 조직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 7명 배출(최초목사 안수). 1912년 평남노회 조직	
황해도	해주	해주 구세병원	1909년 감리교 해주지방회 승격. 1910년 해주구세병원 설립, 의료선교 본격화
	소래	소래교회	1884년 서상륜(徐相濬)이 고향인 황해도 장연의 소래(松川)에 최초의 교회당 설립
	개성	남부교회	개성(松都) 미 남감리회 선교회 중심지. 1898년 남부교회 설립, 남감리회 개성선교의 첫 결실
		한영서원	1906년 남감리회 후원으로 윤치호가 설립한 초등 및 중등 교육 기관
	재령	신환포교회	1906년 미 북장로회 재령선교부 개설. 1893년 신환포교회설립, 천주교와의 충돌
	곡산	곡산읍교회	1894년 해서지방 순회전도사 서경조에 의해 설립
강원도	원산 · 덕원	창천교회	1903년 창천교회에서 장로교 · 감리교 · 침례교 선교사들의 집회(삼파 연합사경회), 1907년 대부흥의 시작
	금강산	기독교 수양관	1931년 제20회 장로교총회 개최, 현당식 거행. 외국의 헌금이나 원조없이 한인 자력으로 건립, 초교파적으로 이용. 1941년 철거

출처: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북한교회사 집필위원회, 『북한교회사』(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참고하여 저자 작성

북한지역 기독교 사적지 현장실사에서는 사적지의 보존유무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반종교 정책과 1960년대 북한에서 더 이상 종교가 체제위협 요인이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했던 사실로 유추해볼 때,⁸²⁾ 기독교 사적지가 남아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경우 한국교회는 북한의 동의를 얻어 북한지역 기독교 사적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을 투자할 수 있으며, 이 예산은 한국교회가 ‘평화비용’으로 인식하여 연합으로 모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북한 현장실사를 통해 손익 분기점 차원의 사업 타당성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기독교 사적지 복원은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기여한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부각되어야 하며, 여기에 대해서 한국교회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사적지 관광협력은 북한당국과 한국교회의 ‘공동 경제활동’이지만, 사업의 주체는 북한이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이 사업에 국가재원을 투자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보는 바, 한국교회가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비용 차원에서, 교단이 사업시행 주체라면 각 교단별로, 교단연합체가 교회연합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각 교단별로 예산을 분담하여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각 교단의 경우, 교단별로 통일 이후를 대비, 북한선교를 위해 조성한 기금이 있다면, 그 기금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북한당국의 정치적 부담에 따른 비협조와 사적지 원형복원에 따른 한국교회의 재정 부담이 과중하다면, 다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때는 사적의 ‘원형유지’ 원칙 중 하나의 방법을 접목할 수 있다. 사적의 원형유지는 보존(preservation), 복원(restoration), 보전(conservation), 재

82) 김일성, “학생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참된 후비대로서 교육교양하자(1968. 3. 14),” 『김일성저작집』 2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52.

조립(reconstitution), 전용(adaptive reuse), 재축(reconstruction), 복제(replication) 등의 방법이 허용된다.⁸³⁾ 이 중에서 복제의 원칙을 변용하여, 북한 기독교 사적지 위치에 표지석, 안내문, 실물현판 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사적지 관광협력에서 고려할 사항은 교회사적으로 중대한 사건이나 자취가 있는 장소가 북한전역에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지역 기독교 사적지를 크게 2개의 권역으로 나눌 수도 있다. 1권역은 북·중 접경지역에서 평양까지, 2권역은 평양 이남의 내륙지방을 포함한다. 현재 북한은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관광을 ‘변경관광’, 내륙지방을 대상으로 한 관광은 ‘일반관광’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점을 참조한다면, 변경관광 지역 사적지 경우 중국지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중국 이해 당사자와 연계하여 관광협력을 공동 진행하는 로드맵을 고려해볼 필요도 있다. 일반관광 지역 사적지는 한국교회 단독으로 관광협력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남북한 직항로(Direct S-N Air Route) 이용 등 최대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하는 다양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북한당국과 협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이 글은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했다. 하나는 ‘기존 한반도 통일논의는 현실에 부합하는가? 한반도 통일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논의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교회는 한반도 통일을

83) 김창규 외, 『사적 지정제도의 개선방안연구』, 22-23.

위해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당장의 제도 일원화를 목표로 하는 통일보다는 적대관계 종식과 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해야 하고, 그런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기제로 평화경제에 대해 설명했다. 후자에 대해서는 평화경제 여건을 조성·촉진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 관광인 점에 착안하여 북한지역 기독교 사적지 관광협력을 제안하며, 협력의 방향과 내용을 탐색했다.

지금까지의 통일논의, 즉 세 가지 통일담론과 두 가지 통일방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당장의 제도 일원화를 목표로 하는 통일논의는 현실과의 정합성이 떨어진다 하겠다. 이미 2국가—2체제로 정립되어 있는 한반도의 정치·경제적 지형을 인정한다면, 바람직한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단일국가 수립이라는 원칙과 현실적 접근이라는 유연성 사이에서 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쪽이 패하고 한쪽이 이기는’ 방식의 통일, 2개의 전혀 다른 체제와 제도를 하나로 만드는 일회적 결과로서의 통일, 이런 통일은 남북한 모두에게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결과로 귀결되기 십상이다. 통일은 분단 상태의 현상변경을 최종목표로 하되, 독립적인 두 국가체제를 상호인정하고 남북한 모두 삶의 질이 향상되는 적극적 평화가 지속가능해지는 장기적인 과정의 최대치(最大置)여야 한다.

통일을 적극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 장기적인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구체적인 이행기제는 평화경제이다. 그리고 평화경제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은 북한과의 관광협력이다.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평화산업’으로서, 관광의 역할의 가치와 실효성은 이미 구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뿐

아니라 현존 사회주의 국가들의 사례들에서도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북한의 경우,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사회주의 경제의 모순과 내부자원 동원방식의 자력경제의 한계, 그리고 핵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을 국가핵심 사업으로 지정하고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는 외부사회의 인도적 지원과 원조에 의존하던 기존의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고, 자체의 힘으로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북한 나름의 자활의지에 따른 결정이다.

‘관광을 통한 평화’와 한국교회 과제를 접맥한 구상은 사적지 관광협력이다. 한국교회는 통일은 평화와 변증법적 관계에 있음을 인식하고, 적대관계 종식과 남북한 정치·군사적 긴장완화를 통해 양질의 평화를 구축하고 ‘사실상의’ 통일에 접근한다는 차원에서 평화경제의 의미와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3년 이후 북한이 관광산업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명확하지만 현 시점으로는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코로나19 대유행이 호전되더라도, 북미 비핵화 협상과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해제가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향후 한반도 지정학적 환경에 변화가 생겨 북한과의 협력이 더욱 진전되고 사적지 관광협력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된다면,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교회가 범교단적으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제공했을 때의 경험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당시 북한은 북한사회 내부로의 파장을 염려하여 제한된 범위 안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행태를 보여주었다.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책은 일정 부분 외부세계에 북한사회를 개방하더라도 사회주의 체제의 절대성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다. 두말할 나위 없이 한국교회 입장에서 이는 북한과의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한계점이

될 수 있겠으나, 북한과의 협력이라는 큰 틀을 결정적으로 좌우할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한국교회는 북한과의 협력에 있어서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형태의 협력방향과 내용을 제시하고, 북한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체제의 위협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사적지 관광협력은 남북한 상생의 길이다. 북한은 국가 경제발전과 인민 경제문제 해결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면서 동시에 외부세계에 종교와 인권에 대한 개방성을 보여줌으로써 국가 이미지 향상과 같은 다양한 긍정적 파급효과를 확보할 수 있다. 한국교회는 남과 북의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한반도의 '냉전의 덩어리'를 걷어내어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평화를 구축하는 데 일조할 기회이다. 관광은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정치적 언술이나 행위보다 효과적이다. 한국교회의 사적지 관광협력은 남북한 정치·군사적 긴장 해소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협 완화, 그리고 장기적 평화정착을 통한 사실상의 통일을 위한 '작은 발걸음'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 강남국. “남북통일을 향한 관광교류의 전개방향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15-1 (2000), 88-115.
- 강채연. “김정은 시대 관광산업의 국제화전략과 협력의 선택적 이중구조.” 『한국 동북아논총』 95 (2020), 101-125.
- 김근식. “연합과 연방: 통일방안의 폐쇄성과 통일과정의 개방성-6·15 공동선언 2항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19-4 (2003), 155-176.
- 김세균. “남북한의 정치통합과 민족공동체 건설의 방향.” 『한국과 국제정치』 16-1 (2000), 197-224.
- 김수경. “북한에 대한 제3차 보편적정례검토(UPR) 평가와 북한인권 증진 방향.”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9-09 (2019. 5. 22), 1-7.
- 김승렬. “유럽통합 초기(1945-1957)에 있어서 ‘기능주의(functionalism)’에 대한 논쟁.” 『EU학 연구』 5-1 (2000), 5-36.
- .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생산의 연대’?: 프랑스의 유럽석탄철강공동체 계획(슈만플랜)의 기원과 의미(1945-1950).” 『프랑스사 연구』 6 (2002), 29-57.
- 김연철. “한반도 평화경제론: 평화와 경제협력의 순선회.” 『북한연구학회보』 10-1 (2006), 51-73.
- 김영운 외.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서울: 통일연구원, 2005.
- 김일성. “학생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참된 후비대로서 교육교양하자 (1968. 3. 14).” 『김일성저작집』 2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38-68.
- 김정일. “민주주의감보자 주석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1985. 5. 2).” 『김정일 선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218-235.
- 김지영. “대의 원조에 대한 북한의 인식 연구: 로동신문 기사분석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연구』 11-3 (2019), 17-38.
- 김진호 · 김평성 · 신민석. “‘관광을 통한 평화’(Peace Tourism)의 창출: 중국-대만 관광교류 사례가 한반도 평화에 주는 함의.” 『평화학연구』 9-3 (2008), 113-142.
- 김창규 외. 『사적 지정제도의 개선방안연구』. 대전: 문화재청, 2009.

- 박명림. “한반도 정전체제 : 등장, 구조, 특성, 변화.” 『한국과 국제정치』 22-1 (2006), 1-32.
- 박명순. “관광자원개발리용에 대한 통계적연구에서 나서는 문제.” 『경제연구』 168 (2015), 37-40.
- 박민철. “통일의 동력으로서의 민족이라는 새로운 ‘환상체계.’” 『한국학연구』 52 (2015), 73-99.
- 박성영. “관광재산이 사회경제발전에서 가지는 의의.” 『경제연구』 168 (2015), 40-41.
- 박정진. “국제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본 김정은 시대의 북한관광 변화 연구: 관광객 유치 해외 공급망과 외래관광객 유치 여행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32-6 (2019), 77-90.
- 박현선. “남북관광교류협력이 북한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교류협력 과제.” 『북한연구학회보』 9-1 (2005), 205-233.
- 서보혁 외. 『평화경제의 비전과 추진방향: 남북 육상 해양협력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20.
- 신동진. 『통일비용에 대한 기존연구 검토』.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2011.
- 신용석·최정은. 『신남북 관광협력의 정책방향과 과제』.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 신정화.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의 변화: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4-2 (2010), 133-158.
- 심지연. 『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와 수렴』. 서울: 돌베개, 2001.
- 안경모. “북한 급변사태 논의의 역설: 간과된 변수로서의 ‘북한.’” 『국제관계연구』 21-2 (2016), 31-60.
- 윤인주. “김정은 시대 북한의 관광산업 평가 및 전망.” 『북한연구학회보』 19-1 (2015), 93-123.
- 윤 황. “북한의 종교정책과 종교실태를 통해 본 종교국가화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8-2 (2004), 229-248.
- . “평화경제를 통한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대전략 구상.” 『평화학연구』 14-5 (2013), 25-50.
- 이병수. “통일의 당위성 담론에 대한 반성적 고찰.” 『시대와 철학』 21-2 (2010), 355-388.
- 이석희·강정인. “왜 통일인가?: 세 가지 통일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정

- 치연구」 26-2 (2017), 1-27.
- 이승욱.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특구전략: 영역화, 분권화, 그리고 중국식 개혁개방?”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9-1 (2016), 122-142.
- 이원웅. “국제사회 인권압력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비판적 평가.” 「국제정치논총」 47-1 (2007), 215-233.
- 이종석. 『분단시대의 통일학』. 서울: 한올아카데미, 1998.
- 이호영. 『다자기구에서의 ‘평화’와 ‘경제’의 개념 및 남북협력에 대한 시사점』. 서울: 국립외교원, 2021.
- 일민국제관계연구원. “『북한의 미래』 전문가 설문조사 보고서.” 「국제관계연구」 19-2 (2014), 171-192.
- 전영명. “사회주의관광업의 본질적특성과 역할,”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493 (2015), 71-74.
- 전재성. “한반도 통일에 관한 이론적 고찰.” 「통일과 평화」 1-1 (2009), 72-109.
- 정영철. “국가-민족 우선의 통일론에 대한 성찰.” 「통일인문학」 74 (2018), 227-260.
- . “북한 종교정책의 변화와 현재” 『남북문화예술연구』 3 (2007), 33-72.
-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이론의 긴장과 현실의 통합.” 「북한연구학회보」 14-2 (2010), 181-214.
- 정유석. “김정은의 현지도와 관광정책.” 「통일문제연구」 28-2 (2016), 159-193.
- 정지웅. “북한 붕괴론 논쟁 탐구.” 「통일과 평화」 9-1 (2017), 162-194.
- 제성호.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북한식 연방제 통일의 위헌성.” 「법학논문집」 40-2 (2016), 209-246.
- 조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이론적 틀: 평화경제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통일연구원 개원 15주년 기념 국내학술회의 (2006. 4. 7), 1-26.
- 조한범 외. 『국제 평화경제 사례와 한반도』. 서울: 통일연구원, 2020.
- 채재득. “관광업과 그 경제적 특성.” 「경제연구」 91 (1996), 32-36.
- 최완규. “남북한 통일방안의 수렴가능성 연구: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북한연구학회보」 6-1 (2002), 5-26.
- 최재영. 『북녘의 교회를 가다』. 서울: 동연, 2019.
- 최준영. “통일의 이익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통일의 필요성.” 「국가전략」 22-3 (2016), 113-138.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북한교회사 집필위원회. 『북한교회사』. 서울: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1996.

홍민 외. 『북한의 발전전략과 평화경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서울: 통일연구원, 2020.

홍성국. 『평화경제론: 분단비용, 통일비용, 그리고 평화비용』. 서울: 다해, 2006.

Anson, Caroline. "Planning for Peace: The Role of Tourism in the Aftermath of Violence." *Journal of Travel Research* 38-1 (August 1999), 57-61.

Barbieri, Katherine and Jack S. Levy. "Does War Impede Trade? A Response to Anderton & Carter." *Journal of Peace Research* 38-5 (September 2001), 619-624.

Butler, Richard W and Baodi Mao. "Tourism between Partitioned States: The Need for a New Conceptual Approach." *Korean Journal of Hotel Administration* 1-1 (1999), 41-47.

Copeland, Dale.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Wa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5.

D'Amore, Louis J. "Tourism: A Vital Force for Peace." *Tourism Management* 9-2 (June 1988), 151-154.

Gartzke, Erik. "The Capitalist Pea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1-1 (January 2007), 166-191.

Guo, Yingzhi, Samuel Seongseop Kim, Dallen J. Timothy and Kuo-Chang Wang. "Tourism and reconciliation between Mainland China and Taiwan." *Tourism Management* 27-5 (October 2006), 997-1005.

Kant, Immanuel. *Zum ewigen Frieden. Ein philosophischer Entwurf*. 이한구 역. 『영구 평화론: 하나의 철학적 기획』. 서울: 서광사, 2008.

Kim, Samuel Seongseop, Bruce Prideaux and Jillian Prideaux. "Using Tourism to Promot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nals of Tourism Research* 34-2 (April 2007), 291-309.

Nye, Joseph and Robert Keohane. *Power and Interdependence*. Boston: Little Brown, 1977.

Pedersen, Sune B. "A Passport to Peace? Modern Tourism and Internationalist Idealism." *European Review* 28-3 (June 2020), 389-402.

Pizam, Abraham, Aliza Fleischer and Yoel Mansfeld. "Tourism and Social Change: The Case of Israeli Ecotourists Visiting Jordan." *Journal*

of Travel Research 41-2 (November 2002), 177-184.

Steffen, Barbara D. "Tourism as an Instrument of Peace Is Cross-cultural Preparation the Answer? Rationale and Methodology." *Visions in Leisure and Business* 16-1 (1997), 26-35.

Wallensteen, Peter. *Quality Peace: Peacebuilding, Victory, & World Ord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로동신문」

「조선신보」

「조선중앙통신」